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장은하 부연구위원 (Tel: 02-3156-7064 / e-mail: ehchang@kwidimail.re.kr)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평등 독자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현황 점검

### SDG 5 성평등 독자목표

- 5.1 차별 종식**
  - 양성평등 법적 체계 존재여부
- 5.2 폭력 철폐**
  -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경험 비율
  -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경험 비율
- 5.3 유해한 관습의 근절**
  -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 여성 비율
  - 여성성기절제(FGM/C) 비율
- 5.4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
  -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비율
- 5.5 의사결정 참여 및 리더십**
  -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 여성 관리직 비율
- 5.6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리**
  -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 비율
  -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법률 및 규정
- 5.a 여성의 경제적 자원**
  - 여성 토지소유자 비율
  - 여성의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 보장
- 5.b 정보통신기술**
  - 성별 휴대폰 보유율
- 5.c 정책과 법**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 국제사회가 새롭게 채택한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목표를 제시함. SDGs는 이전의 MDGs와 차별화되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개발목표의 달성에 대한 노력과 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SDGs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SDG 5 성평등 독자 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함. 이를 통해 향후 SDG 5 젠더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연구결과, 한국은 SDGs 성평등 지표와 대응하는 통계지표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일부 성평등 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반면, 본고에서는 SDGs의 적극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맥락을 반영한 대안 목표 및 지표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 연구는 한국의 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의 이행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의 SDGs 성평등 관련 목표의 로드맵 수립과 실질적 달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1. 배경 및 문제점

- ④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음.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indicators)로 구성됨(IAEG-SDGs(2017)).
- ④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독자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가 채택되었으며,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었음.
- ④ 특히 SDGs 5번에서는 구조적 이슈들이 대거 포진되어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 ④ SDG 5 글로벌 이행 현황과 국내 이행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본 연구는 다음 목적을 가지고 있음.
  - ▶ 첫째, SDGs 내 성 평등 독자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미를 분석함.

- ▶ 둘째,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 셋째, 향후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함.

## 2. SDG 5 성평등 독자목표 분석결과

### SDG 5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 MDGs의 성평등 목표에서는 모성보건, 성평등을 다루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MDGs의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SDGs를 위한 논의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달성을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적(transformative) 접근을 촉구함(UN Women, 2013). 이러한 시각 하에, SDG 5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변화를 위한 목표들이 대거 진입하게 됨. 성평등 독자목표 5의 세부목표의 의의와 각 지표의 가용통계 및 이행현황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음.

###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 세부목표 5.1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종식을 목표로 함.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함. 본 목표는 5번 목표 이하의 다른 세부목표들을 아우르는 원칙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으며,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를 제시함.
- ▶ 지표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국내 현황을 보면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법적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고, 법적 근거에 따라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설치되어 있음.

###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 ▶ 세부목표 5.2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공동의 보편적인 문제임. 이러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북경행동강령과 유엔여성인권차별철폐협약(CEDAW), 카이로행동계획(CPD Programme of Action) 등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됨.
- ▶ 지표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지표 5.2.1은 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를 포함하는 성적 파트너(intimate partner)로부터 경험하는 육체적, 성적, 심리적 형태의 폭력을 모두 다루고 있음. 또한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소녀에 대한 폭력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 국내에는 지표 5.2.1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나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데이트 폭력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여성이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가늠해 볼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의 신뢰성을 갖고 있으나, 동거상태가 아닌 비동거 상태의 성적 파트너에게 당한 폭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데이트폭력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을 만 18세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녀가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지표 5.2.1의 국내 이행과 SDG 5 국가 보고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통계자료의 개발이 요구됨.
- ▶ 지표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지표 5.2.2는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율을 조사함.
- ▶ 지표 5.2.2에 관한 국내 가용 통계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검토할 수 있음. 최근 실시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2015년 8월~2016년 7월) 동안 남성(0.1%)에 비해 여성(1.5%)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나, 신체적 성폭력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은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 ▶ 5.3 세부목표는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MDGs에 비해 SDGs가 젠더적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되는 세부목표 중 하나임. 유엔(UN)에서는 조혼, 여성할례 등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 문제를 여성 및 소녀의 재생산보건 및 성·재생산권을 포함한 여성 및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자유를 저해하는 차별이자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정의하고 있음.
- ▶ 지표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지표 5.3.1은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로서 언급된 아동결혼 및 조혼에 대한 지표로서, 20~24세의 여성인구 중에서, 15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과, 18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검토함.
- ▶ 지표 5.3.1의 경우, 국내에 가용통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연령별로 작성되는 통계청 인구센서스의 혼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등의 통계가 존재하나, 혼인통계의 경우,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조사 자료가 미비하기도 하고, 18세 이전의 동거 경험 혹은 사실혼 경험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 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지표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지표 5.3.2는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로서 제시된 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M/C)에 대한 지표로서 15~49세 사이 여성인구 중에서 여성성기절제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로 측정됨.
- ▶ 지표인 5.3.2와 관련해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성기절제가 주로 종교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으므로, 국내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동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와 국내적 상황과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 ▶ 5.4 세부목표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게 부과되는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이를 위한 국가적 정책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 돌봄과 가사노동의 남녀 간 분배는 그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시장 참여, 임금 및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의 문제 및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 ▶ 지표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유엔 통계국이 제시하는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정의는 자가 최종소비를 위한 무급 생산활동으로서, 자가소비(self-consumption)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무보수 노동과, 공동체와 환경,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외의 타인을 위해 무보수로 수행되는 봉사활동을 포함함. 지표의 계산 방식은 개인의 전체 시간 중에서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로 계산되며, 성별, 연령, 지역(도시/지방)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혼인상태, 소득, 장애여부, 인종/민족 등의 분류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권장하고 있음.
- ▶ 5.4.1지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가용통계가 행동별·집단별로 일별 분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 국내 가용 통계 중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검토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서 여성이 약 3~5배의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업무(일)에 활용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아 남녀 간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시간의 사용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 ▶ 1995년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권력구조와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를 선정함. 세부목표 5.5 역시 지속가능 발전목표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SDG 5 수립을 위한 UN의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8차 회의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성평등 달성을 위한 우선 사항으로 선정함.
- ▶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동 지표는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을 측정함. 의회의 경우 전체 여성과 남성의 의석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단원제 또는 하원 의원석의 비율(%)로 계산되며, 지방정부의 경우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체 여성과 남성의 수 중에서 여성이 대표직을 맡은 수의 비율(%)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경우 각 국가의 지방정부의 구성에 따라 자료를 수집 할 수 있음.
- ▶ 지표 5.5.1의 경우 국내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당선인 통계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대 선거와 더불어 재·보궐선거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지표 5.5.1에 대한 국내 지표 산출이 가능한. 지방정부의 경우 국회 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인 통계를 살펴볼 수 있으나 '지방정부'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UNSD, 2016)
- ▶ 지표 5.5.2. 여성 관리직 비율: 지표 5.5.2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그 외 분야에서 여성 관리직 비율을 검토함.
- ▶ 관련 국내 가용 통계로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참고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매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여성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판사를 포함한 여성 법조인 비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등, 5.5.2. 지표에서 살펴보고 있는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는 성·재생산 보건 및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여성 및 여아의 인권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게 됨.
- ▶ 지표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지표 5.6.1은 성관계 및 재생산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정에 남성을 비롯하여 여성의 자발적 의사가 얼마나 고려되는지 측정하기 위함임.
- ▶ 지표 5.6.1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음.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측정되며 한국의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출산 형태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됨. 성관계 결정권에 대한 문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피임사용과 성·재생산 보건에 대한 결정권은 몇 개의 문항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5.6.1지표의 국내 이행정도를 충실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지표 5.6.2.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이 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관계 및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 정보, 교육을 법률 및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임. 이는 성관계 및 재생산을 포함한 여성의 보건 문제가 개인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됨을 의미함.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음.
- ▶ 지표 5.6.2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관련 법률과 규정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성적/재생산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규정이 헌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제적 집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 ▶ 여성의 경제적 자원(토지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소유와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이 자원들이 개인과 가구의 수입 창출원이 되며 경제적 충격과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여성은 또한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협상력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
- ▶ 지표 5.a.1.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농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a)는 전체 농업 종사자 중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함. 반면 (b)는 양성 평등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지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의 정도를 나타냄.
- ▶ 본 지표를 한국에서 적용할 경우, 단지 농지소유 뿐 아니라 각종 동산 및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지표로 그 해석을 확대해 볼 수 있음. 현재 한국의 경우 토지소유현황에 대해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에 성별 구분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음. 또 다른 지표로는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을 고려할 수 있음. 2017년의 경우 남성은 56.4%(751만2천명), 여성은 42.4% (580만 1천명)으로 주택 소유율에 있어 남성이 약 1.29 배 높았으나, 여성소유자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 지표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본 지표의 정확한 정의는 “법적근거는 여성의 토지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special measures)를 포함한다”임. 한국의 경우 「헌법 23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동 지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원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 ▶ 현재 정보통신기술은 마케팅 및 은행업무 등 다수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는 농촌 및 벽지 거주자의 정보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 현재 휴대전화 보급률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이 지표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매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환경과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을 참고할 수 있음. 2016년 현재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87.9%, 여성은 82.2%로 남성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이용률의 경우, 2016년 남성이 86.7%, 여성이 80.6%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 📍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 ▶ 본 지표는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정책 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본 지표는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cycle)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예산 배분 및 지출을 1) 추적하고 2) 공개하는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고자 함.
- ▶ 본 지표는 통계의 수치가 아닌 시스템의 존재의 여부를 제시하고 있음. 한국에는 성별영향 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이 존재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 내에 다양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음.

### 3. 정책제언

#### SDG 5 성평등 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

- ▶ SDG 5 성평등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의 로드맵 구축을 제안함. 2015–2020년의 첫 5년은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20–2025의 다음 5년은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강화, 2025–2030의 마지막 5년은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성할 수 있음.

[그림 1] SDG 5 성평등 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로드맵



#### 참고자료

- IAEG-SDG 5 (2017).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 15 December 2017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 UNSD (2016).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5.pdf>
- UN Women (2013).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New York: UN Women, <http://www.unwomen.org/>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환경부